

반도체 특별법 무산 후폭풍... 여야 '주52시간' 공방 가열



소상공인·중소기업 5대 민생입법 촉구
1.중소기업살리는 1.은플법 2.대체형상5법 3.미래자동차전환정비업자보호법 4.자영업자 계약안정성 강화법 5.남플대금연동
1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중소기업 5대 민생입법 촉구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근로 시간 유연성 필수... 경쟁국 뛰는데 한국은 발 묶어" 민주 "탄력 근로, 사회적 합의 필요... 가능한 법부터 처리해야"

여야는 18일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포함해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이에 반도체 특별법은 전날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두고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 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냐 마찬가지로"라며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연구·개발은 미세공정, 고밀도 집적회로 설계 등 기술 난도가 높다. 게다가 고객별 맞춤형 제품 개발이 동시에 진행된다. 업무 성격상 엔지니어의 근로 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다"면서 "미국 엔지니어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 경쟁국이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것 하나만 봐도 이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성장론 거짓말이며 조기 대선을 위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 술책일 뿐이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추경을 포함해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정책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추경 편성 원칙은 가장 절실한 곳에 가장 먼저 쓴다는 '핀셋 추경'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반도체 특별법 무산에 대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주52시간 예외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봉기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지는 것

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 그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또 "주52시간 예외"는 노동 총량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야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며, 여기에는 여야 모두가 이미 합의했다"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에 정쟁을 앞세우지 말자"며 "국민의힘에 부디 더는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합의가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봉기로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악화된다면 기술 패권 경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커지고 이는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오롯이 국민의힘의 책임이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야 5당, 오늘 '내란 종식 원탁회의' 출범

정치·사회 개혁 선언문 발표... 개혁신당 불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범야권 연대체를 만든다.

18일 야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19일 '내란 종식과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원탁회의'(가칭)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개혁신당은 참여를 하지 않는다.

야 5당 대표들은 19일 국회에서 원탁회의의 출범식을 열고 내란 종식과 더불어 정치개혁과 사회적

개혁, 민생개혁 등 3대 개혁 지향점을 담은 선언문을 함께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야권의 원탁회의의 구성 논의는 지난 2일 조국혁신당이 처음 제안하고, 이튿날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원탁회의에는 개혁신당까지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일단 개혁신당을 제외한 5개 야당만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야 5당의 원탁회의의 구성을 놓고 정치권에선 사

실상 조기 대선용 야권 연대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질 경우 박영의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탁회의가 내란 종식과 사회 개혁을 고리로 전야권이 하나로 뭉치는 하나의 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민주당은 당장 '대선 연대'라는 정치권 해석에 선을 그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원탁회의는 대선용이 아니다"라면서 "계엄으로 훼손된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며 사회 대개혁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여객선 환승 가능...섬 주민 교통권 보장

서삼석,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8일 "국민은 누구나 버스·철도를 이용해 영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있지만,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 이용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목표인 60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객선 중 일반선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46.4%로 휠체어 승강설비는 전무했다. 현재까지도 육상·해상 대중교통 간 연계 및 환승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총 여객선의 선령은 평균 16년으로, 제한기준인 20년까지 도달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섬 주민이 좀 더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025년까지 여객선공영제 도입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섬 주민 교통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조 항로 결승보상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2025년 정부안은 국가 주도로 항로를 관리·운영하는 예산이 아닌 2024년과 동일한 민간선사 결승금만 지급하도록 편성했다"면서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도 2021년 164대에서 2025년 1월 기준 150대로 14대가 감소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철도·지하철·여객선·도선으로 규정하고,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등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여객선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편의 증진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섬 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은 더딘 수준이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22-2026년)'에 따르면 정부는 소외도서 항로 지원을 비롯한 ▲연안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향상 ▲이용시설 개선 ▲연안여객선 선박 현대화 ▲연안여객선의 연계·환승체계 구축 등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서 의원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편의 증진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섬 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은 더딘 수준이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22-2026년)'에 따르면 정부는 소외도서 항로 지원을 비롯한 ▲연안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향상 ▲이용시설 개선 ▲연안여객선 선박 현대화 ▲연안여객선의 연계·환승체계 구축 등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제안안은 국가가 공영 항로를 지정·운영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축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해상 대중교통 이용객의 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기준 소외도서는 67개로,

서 의원은 "섬 주민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통권 보장과 해상 대중교통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주민자치회의 재정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조인철, 법률안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운 주민자치회의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주민들이 더 주체적으로 지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주민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운영을 주도하는 '지역 거버넌스'가 실현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지방정부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이 불가능해 주민자치회가 그저 형식적 조직에 머무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주민자치회가 지역 거버넌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을 기초·광역 지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록신문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가재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창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창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창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